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CEO 보수의 한계

미국 CEO들은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미국 CEO 중 최고의 보수를 받은 경영자는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으로 96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00억 원 상당을 받았다. 뉴욕 타임즈는 매년 최고 경영자들의 보수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지난해의 조사 결과를 이번에도 보도한 것이다. 도대체 래리 엘리슨은 얼마나 대단한 실적을 낸 것일까?

그런데 오라클 최고 경영자의 보수가 지난해 20% 이상 오른 반면 정작 회사 주가는 20%나 떨어졌다고 한다. 회사 주가는 떨어지는데 그 최고 책임자의 보수가 대폭 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래리 엘리슨은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이고, 지금도 회사 주식을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3대 부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CEO 보수에는 아무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것인가?

스위스는 지난 3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민간 기업 CEO 보수 수준은 주주들의 의견을 받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반하면 연봉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국민투표를 거친 이 법안은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문제의 발단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게 된

간기업 CEO들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루지은행 UBS, 크레디 스위스 은행, 제약회사 노바티스 등의 CEO가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보수와 퇴직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결국 입법화에 이른 것이다. 민간기업이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그것은 기업의 자율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경영이 실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업에서도 경영진에게 높은 보수를 자율적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일까? 만약에 기업이 잘못되어 공격자금이 투입된다면 최고 경영진의 보수를 국민이 대신 지급해 주는 것과 같은 예도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 문제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대공황 때 미국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슈이다.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1000만 명이 상이 실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고위 경영자들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한다. 의회는 서둘러 법안을 마련하여 경영진의 보수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일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 감독미흡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자 그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최고 경영진 보수에 관한 법안을 대폭 보완하게 된다. 2010년 7월 발표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최고 경영진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최고 경영자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도록 규정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임원 보수에 대해 투명한 결정과 주주들의 승인을 요구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지켜보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EU 각료회의는 최근 은행 경영진의 보너스가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금융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회원국 과반수가 동의하면 보너스 제한 법안은 내년부터 발표된다. EU는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를 즉각 환영하고 EU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혀 EU의 법제화 작업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이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EU 회원국 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경영진 보수에 대한 반감 여론이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정무위)가 지난 달 상장사 임원의 개별 보수 내역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법안대로 임원의 보수 내역을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노사간 위화감 조성, 기업간 임원보수 인상 경쟁 유발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경영진의 보수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일찍이 퍼터 드러커는 최고 경영진의 보수가 그 회사 근로자 평균의 2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미국 최고 경영자의 보수는 생산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39배에 달했다고 한다. 그 비율이 이탈리아에서는 26배, 뉴질랜드에서는 25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소득분배 왜곡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기업의 경쟁력은 전 근로자의 열정과 창의력에서 나온다. 주인의식을 갖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근무의욕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위화감을 갖게 하는 과도한 보수격차는 기업 발전이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社說

‘안보 외면’ 지방의원 국외연수 붓물이라니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붓물을 이뤄 비난이 일고 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일촉즉발 위기인데다 연수 대부분이 외유성이어서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1일 광주·전남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다녀왔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한 연수에는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 가운데 12명이 수행원 등 11명 정도가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이런 외유성 연수는 전쟁 발발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줄을 잇고 있어 ‘안보 외면’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장흥군의회, 강진군의회, 신안군의회, 장성군의회 등이 2~4월 유럽, 일본, 태국 등지를 다녀왔다. 광주 북구의 회 의원 8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

일까지 그리스 일대를, 9명은 중국 등지를 방문했다. 또 남구의회 의원 4명도 북구의회와 함께 그리스 등을 동행했으며 4명은 최근 싱가포르 일대를 견학했다. 각 의회는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취소시 위약금 때문에 강행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방문지를 보면 외유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고, 실제 목포시의회는 취소하기도 했다.

물론 지방의원들이 선진지를 살펴보고 교류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연수 프로그램이 관광에 치중해 있다는 것은 형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해외연수는 목적 못지않게 시기·방법도 주된 정서에 맞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이제라도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그려면 해외유성 연수 논란에서 벗어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악화되는 지방재정, 정부는 대체 뭘 하나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이 최악의 상황이다. 안전행정부가 9일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 개요'에 따르면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5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7%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40.1%)와 전남도(16.3%)는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강진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인 7.3%에 불과했다.

전남도도 22개 시·군 가운데 10% 미만인 7개 군에 달하고, 1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광주 동구와 남구, 전남에선 강진군을 비롯해 함평,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완도, 신안 등 11곳이나 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재정 파탄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화될 때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방 확대와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긴 게 주요 요인이다. 또한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개발과 축재 등 선심성 사업을 벌이거나 지자체의 줄줄 새는 예산 낭비도 문제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 복지비 지출을 환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심의·평가 등 엄격한 재정을 단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단체장의 흥분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파탄난 결과 그 고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



하성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되었다. 이면에는 남북 공동변영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깃들여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기세는 멈추었고 북측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남북간 교역과 실낱같이 이어 온 남북간의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다. 서로에게 불이익인데 왜 극단적인 발언과 강경책으로만 나아가는가!

이유가 어찌 되었든 MB정부는 대북강경 정책으로 남북간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고,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쌓아올린 남북의 교류 10년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무조건적 파주 기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우리는 지금 전쟁이 무서워서 연일 대북 관계와 남북의 군사력을 서로 비교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위에 계시는 높은 분들은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듯이 국민을 위해 자신을 초개처럼 버리고 봉사 헌신할 것이라 굳게 믿고 싶다. 자기이익과 특권층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국민과 민족을 위하는 마음

이야말로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위력 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아픔을 삼키며 멍든 가슴을 달래며 살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산 송규 원불교의 2대 종법사는 국운편 22장에 “무엇이나 극(極)하면 변고가 생기고 과(過)하면 폐단이 있나니, 그러므로 극과 과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구세의 요법이 되나니라.”라했다.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이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빛날의 쇠함을 불러들인다고 하였다. 극하면 변한다. 과하면 그 끝이 보이는 것이다. 전쟁의 아수라장에서도 평화의 씨를 트고 평화가 지속되다 보면 분명 통일은 올 것이다. 통일의 시기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이 바로 평화의 마지막 고통을 치르는 통일을 앞둔 꽃샘 추위가 아닐까 싶다.

몸에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난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상처는 아물고 새 살이 돌아나게 된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면 그 상처는 더욱 악화 될 것이다.

북한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 공포심을 유발하여 서로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안으로 평양에선 춤을 추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밖으로는 미사일 발사임박을 알리며 전쟁분위기 조성을 호들갑이다. 동요되어서도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심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짜증날 정도로 의연하게 자신의 말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스한 마음과 끈끈한 민족애 그리고 근면 성실한 국민성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과 주장에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일 것이다.

기고

11개교 지망 고입배정방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지원에서 9개교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하다. 고입 배정 방식을 결정할 때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결정할 것인가, 공급자 중심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변경하기 이전의 고입 배정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철저히 존중한 수요자 중심의 배정 방식이었다. 물론 이 방식이 최선이고, 최고의 배정방식이라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이전 방식 역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나 성적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공·사립별 학교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하였지만 일부 학교나 교사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고입 배정방식 사안을 교훈 삼아 광주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첫째, 정책을 추진할 때 검증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진학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생활해야 할 고

교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한 후, 등하교 시간에만 하루 1~2시간 넘게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교육청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이 광주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인지,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결정 이전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둘째,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학생·학부모와 입장은 다르지만 정책결정권자의 철학에 맞춰 교육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되짚어 보고 추진하기를 바란다.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듯이 고입배정 정책 역시 확실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수요자가 무엇을 요구한 지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고입배정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고입배정 후 두 달이 넘도록 아직도 미완이 계속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교육수요자가 희망하는 학교는 어떠한 학교이며, 비록 정책결정권자의 철학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배정해야 할지를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정답은 아닐지라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립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 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의 무한한 헌신과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람과 긍지로 신바람나게 학생들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교육환경을 만든 후에 정책을 결정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無等鼓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코스에서는 매년 4월 둘째주 미국 프로골프 PGA 4대 메이저 대회인 하나인 마스터스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마스터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운영체제와 관리로 인해 메이저 대회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메이저 대회와 달리 해마다 장소를 옮겨 개최하지만 마스터스는

언지 못했으니 무게를 줄이고 회원 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식 복장으로 자리잡았다. 마스터스 우승자에게 이 재킷을 입혀 준 것은 1949년 샘 스니드가 우승했을 때 부터다. 이후 전년도 우승자가 그해 우승자에게 입혀주는 의식이 전통으로 자리잡았고 명예와 전통을 상징하는 마스터스의 심벌이 됐다. 2년 연속 우승자에겐

그린재킷



1934년 창설된 오거스타 골프장 한 곳에서만 열린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만 하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변화무쌍한 유리알 그린에서 살아남기란 여간 어렵다. 스폰서가 없고 일체의 상업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17가지의 대회 참가 선정 기준 등도

마스터스의 권위를 더하는 요소다. 하지만 마스터스의 권위를 상징하는 심벌은 휘니휘니해도 그린재킷이다. 그린재킷은 1937년에 처음 등장했다. 골프장의 회원과 갤러리(관람객)를 구별하기 위해 오거스타의 잔디색을 모방해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계절에 어울리지 않고 색깔도 칙칙해 호응을

오거스타 회장이 직접 재킷을 입혀주는데 64년 역사상 타이거우즈가 유일하다.

그린재킷은 일상에서도 성공의 아이콘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총훈 순천시장은 요즘 그린재킷을 입고 다니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있다.

올해 마스터스 대회가 11일 막을 올렸다. 14일이면 그린재킷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20일에는 6개월 일정의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첫 선을 보인다. 마스터스의 그린재킷 주인공이 최경주가 아닐지라도 정원박람회에선 모두가 그린재킷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정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00-551>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